

ChungNam Report

2016. 8. 19.

CONTENTS

〈 요 약 〉

1.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2. 지방세외수입의 개념과 특징
3. 지방세외수입의 실태와 문제
4. 지방세외수입의 개선방향
5. 정책 제언



이 내용은 충남연구원 홈페이지 www.cni.re.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 세외수입의 문제와 개선과제

고승희

충남연구원 행정복지연구부 연구위원, kosh@cni.re.kr

본 연구는 지방세외수입 운영의 실태와 문제를 토대로 지방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세 외수입의 효율적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데 있음

요약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이라는 두 축으로 자체재원을 구성하고 있음. 이중 세외수입은 주민들의 조세에 대한 저항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자치단체 운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기반임
-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지방세외수입운영의 문제는 다음과 같음.
 - 체계적 관리체계가 미흡하며 세외수입 요율의 기관별 차이와 합리적 원가 산출이 어려움
 - 일반재원을 활용한 적자보전과 유료화 사업의 무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문제와 관련법규 개정의 어려움 등이 있음
- 세외수입의 요금현실화를 위해 요율인상을 통하여 직접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으나 주민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과 물가상승 우려 등의 한계가 있기에 서비스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원가 보상율의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원가분석 개선방안은 원가분석 방법을 선정, 이를 위한 자료를 구축해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위한 관리지침 및 정보관리를 통해 정기적인 원가 분석을 실시해야 함
- 요율부과기준 개선방안으로는 요율결정기준 마련과 표준운영원가를 제시해야 함. 또한 제도와 관련해 통합징수조례에 대한 검토 및 T/F 운영, 세외수입 운영계획 수립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할 수 있음

01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

-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음
 -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따라 자치단체는 자체 재정을 확보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자주재원의 증대는 자치단체 운영의 가장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지방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체재원 기반을 강화해야 할 상황이며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 세수를 늘리는 실효성 있는 제도의 마련과 함께 지방세외수입의 확대도 모색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이라는 두 축으로 자체재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주민들의 조세에 대한 저항에 비교적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자치단체 운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저조한 현실이며, 법령의 미비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미구축 등이 지적되고 있음
 - 이에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적기반은 마련되었으며 향후 지방세입정보통합시스템 구축과 이를 운영할 지방세입정보센터를 설치할 예정으로 지방세 외수입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세외수입의 현황과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02

▶ 지방세외수입의 개념과 특징

- 세외수입에 대한 광의의 개념은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시장거래의 성격에 대해서 부과되는 요금, 즉 특정한 편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요금으로 정의됨(Smith, Fred L., 1981)¹⁾
 - 협의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세외수입의 범위를 축소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편익에 대한 요금으로 정의함
-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구분되어짐
 - 첫째,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으로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계속적인 확대 및 개발이 용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잠재 수입원이 될 수 있음
 - 둘째, 세외수입은 종류가 매우 많고 또한 수입근거와 형태가 매우 다양함
 - 셋째,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발굴되어지는 수입이긴 하나, 그 수입원의 법적근거에 따라 사용되는 곳이 특정되어 있는 것도 있음
 - 넷째, 세외수입의 징수형태로는 현금으로 징수(금고납부)하는 것 외에 수입증지나 금권으로 징수하는 것이 있음
 - 다섯째, 세외수입은 주로 특정인의 공물사용 및 역무제공 등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이므로 조세와는 달리 국민저항이 비교적 적음

1) 이 경우 협의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물론 임대수입, 특허수입, 용도가 지정된 물품세, 면허 및 각종 인·허가, 정부재산의 매각수입, 공공대출에 대한 이자수입, 산재 및 공공보험료수입, 공기업운영수입, 재산권수입, 연금 및 건강보험료수입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지방세외수입의 실태와 문제 ◀

03

1) 우리나라 세외수입의 규모

- 지방세외수입 규모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2013년 세외수입 규모는 72,607,629백만 원임
 - 이 중 광역자치단체가 약 32.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단체별로는 시계가 약 34.2%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광역시, 군, 도의 순으로 구계가 가장 적은 비율로 나타났음

〈표 1〉 세외수입 단체별 구성

(단위 : 백만 원, %)

연도별	구분	총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	도	시	군	구
2009	징수액	72,906,399	17,823,208	8,541,391	26,626,722	12,555,120	7,359,958
	구성비	100.0	24.5	11.7	36.5	17.2	10.1
2010	징수액	59,877,959	15,542,957	8,099,894	20,898,470	9,062,702	6,273,936
	구성비	100.0	26.0	13.5	34.9	15.1	10.5
2011	징수액	58,330,065	15,378,654	8,912,464	19,909,478	8,789,659	5,339,810
	구성비	100.0	26.4	15.3	34.1	15.1	9.1
2012	징수액	66,180,254	17,644,666	10,117,804	23,063,817	9,527,944	5,826,023
	구성비	100.0	26.7	15.3	37.8	14.4	8.8
2013	징수액	72,607,629	20,146,108	10,782,522	24,850,383	10,895,980	5,932,636
	구성비	100.0	17.7	14.9	34.2	15.0	8.2

자료 : 2014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 지방재정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세외수입과 지방세 규모를 비교해 보면 2011년 이후 세외수입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지방세는 줄어들어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표 2〉 세외수입과 지방세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징 수 액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비율 %)	1,180,742 100.0	1,098,089 100.0	1,106,287 100.0	1,201,183 100.0	1,263,865 100.0
세외수입 (비율 %)	729,064 61.7	598,780 54.5	583,301 52.7	661,803 55.1	726,076 57.4
지방세 (비율 %)	451,678 38.3	499,309 45.5	522,986 47.3	539,380 44.9	537,789 42.6

자료 : 2014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 2013년 세외수입 징수액은 전년대비 64,273억 원(9.8%)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증가액이 50,355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15.0%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의 증가액은 13,918억 원으로 약 4.3% 증가하였음

〈표 3〉 회계별 징수규모

(단위 : 억 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729,064	598,780	583,301	661,803	726,076
일반 회계	소 계	408,510	305,204	282,350	336,606
	경상적 수입	47,408	42,313	43,985	47,120
	임시적 수입	361,102	262,891	238,365	336,603
특 별 회 계	320,554	293,576	300,951	325,197	339,115

2) 충남도 및 천안시 세외수입

- 충청남도의 2016년 전체 본예산 회계 총괄 기준으로 전체세입 5조6,280억3,400만 원 중 지방세외수입은 1,208억4,100만 원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음

- 2015년 일반회계 결산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세입 5조824억3,800만 원 중 세외수입은 976억6,800만 원으로 1.9%를 차지해, 올해 0.2% 증가한 수치임

〈표 4〉 충청남도 2016년 예산 및 2015년 결산 기준

(단위: 백만 원, %)

항목	2016년 전체 총괄예산		2015년 일반회계 결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세입 총계	5,628,034	100	5,082,438	100.0
지방세	1,487,000	26.4	1,501,448	29.5
세외수입	120,841	2.1	97,668	1.9
지방교부세	550,387	9.8	565,997	11.1
국고보조금	2,617,779	46.5	2,388,825	47.0
지방채	334,165	5.9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517,863	9.2	528,500	10.4

- 본 연구에서 사례로 다룬 2013년 천안시 세외수입의 규모를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은 전체 5,381억2,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623억4,000만 원, 특별회계가 2,757억8,000만 원이었으며, 실 징수액은 4,967억7,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371억1,800만 원, 특별회계 2,596억5,700만원으로 나타남

- 징수율은 전체 92.3%로 일반회계 징수율 90.4%, 특별회계 징수율 94.2%임

3) 세외수입의 문제

① 체계적 관리체계 미흡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세외수입의 징수근거가 다양하여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충남은 전체 세입 중 지방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9%(2015년 일반회계 결산 기준)로 세외수입의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등 인식이 부족해 세외수입의 원가분석을 비롯하여 적정요금의 산출, 조례의 제·개정 등 대부분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음
- 세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이 공공요금으로 여겨지고 있어 물가 또는 공공요금 인상억제와 연계되어 적기에 요율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더하여 사용료와 수수료는 중앙정부의 다양한 근거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어 이를 조정하기에는 번거로움이 따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기관들의 노력도 미흡한 실정임

② 세외수입 요율의 기관별 차이와 합리적 원가 산출의 어려움

- 원가분석에 따른 문제로서 세외수입의 요율을 결정하기 위해 원가분석이 필요시 되지만 원가분석 항목과 방법에 대하여 동일한 서비스 또는 유사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타남

-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각 개별 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이며 지역의 여건과 특징을 반영하여 요율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일한 서비스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큰 것은 문제시 될 수 있음. 이에 유사한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요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음

- 일정한 기준요율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적정한 원가를 산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이에 제공되고 있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원가에 미치지 못한 채로 공급되고 있음

③ 일반재원을 활용한 적자보전과 유료화 사업의 무료서비스 제공

- 원가에 미달된 채 제공된 서비스에 따른 적자보전은 일반재원으로 충당되고 있는 현실임

-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에 있어 불형평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서비스 수요의 과잉이 발생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어렵게 할 수 있음
- 또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업무를 위임하면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 사실상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적절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④ 관련법규 개정의 문제

- 앞서 설명한 것처럼 원가보상율은 중앙정부의 관련법규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법규의 개정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음

- 중앙정부에 의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의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기관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세외수입의 요율을 규정하는 근거법규가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탄력적·신축적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임

지방세외수입의 개선방향 ◀

- 세외수입의 요금현실화를 위해서는 요율인상을 통해 직접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으나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과 물가상승 우려 등에 있어 분명 한계가 있기에 서비스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원가보상율의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1) 원가분석 개선방안

① 원가분석 방법의 선정

- 합리적인 세외수입의 운영을 위해서는 원가분석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원가분석 방법의 설정과 개선이 필요함

② 원가분석을 위한 자료 구축

- 다음으로 정확한 원가분석을 위한 자료가 구축되어야 하며 정확하고 합리적인 원가보상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가분석이 필수임

- 이러한 원가분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각 항목별 구성요소와 단가를 어떻게 선정하고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에 좌우됨

③ 수입·지출 관리지침 및 정보 관리

- 적정 요율부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기술한 것처럼 운영원가의 파악이 필수임
 - 각 개별 서비스의 운영과 이에 따른 수입, 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정확한 수지관리 및 요율산정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시설 및 제공서비스의 수입 및 지출 항목에 대한 통일된 세부화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④ 정기적인 원가분석의 실시

- 원가분석의 방법과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정기적으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원가분석은 세외수입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방안도 되겠으나 재정운영 상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 이를 위해 충남도에서 기본적인 원가분석 대상을 정하고 각 시군에 원가분석을 추진토록 하는 등 전체적인 원가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임

2) 요율부과기준 개선방안

① 요율결정기준 마련

- 요율부과기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원가보상율을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가분석 이후 산정된 원가를 활용하여 해당 서비스에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적용, 부과해야 하는지의 문제라 할 수 있음
 - 요율결정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요율결정기준을 객관적으로 지표화시키고 이 과정에서 많은 관계자가 참여토록 하는 방법이 적절할 수 있을 것임

② 표준운영원가의 제시

- 많은 자치단체들은 세외수입을 통한 세수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원가분석의 경우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거나 차이가 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자치단체별로 같은 서비스이거나 유사한 경우 모든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원가분석을 한다면 시간과 비용의 이중지출이 나타날 수 있음
 - 충남도가 모든 세외수입을 대상으로 표준원가를 설정하고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영역을 설정하여 표준원가를 제시할 수 있어야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3) 관련제도의 검토와 개선방안

① 세외수입 통합징수조례 도입 필요

- 현재 세외수입관련 시설과 서비스의 경우 시설물이 매우 많을 뿐 아니라 운영방식 또한 다양하며 이에 따라 시설물과 서비스 또한 개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개별 조례로 정하여 징수함으로써 서비스 원가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각 개별 운영조례에서 요금과 관련한 조항으로 별도의 통합징수조례를 제정하여 한 번의 조례 개정으로 세외수입의 요율을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세외수입 관련 T/F 및 세외수입심의위원회 운영

-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정수준을 도출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정이며 현재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업무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이를 위한 세외수입관리 T/F 운영으로 관련 부서의 공무원과 전문가, 회계사 등이 함께 참여하여 세외수입에 대한 학습과 함께 제도적 관리와 개선방안을 모색도록 하여야 함

③ 세외수입 운영계획 수립

-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적정요율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시키는 등의 과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각 항목별로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함
 - 현재의 상황과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실천하기 위한 실행계획이 요구되며 이는 앞서 건의한 세외수입 T/F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임

④ 이용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세외수입을 통한 시설물 등의 원가보상율은 운영주체와 방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용활성화를 통한 수입 증가와 지출감소를 통해 원가보상율을 제고할 수 있음

⑤ 운영실적 성과관리의 제도화

-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세외수입의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이를 점검,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여 이를 근거로 위·수탁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충남도는 세외수입의 관리를 위한 평가 또는 관리 매뉴얼을 구성하여 시군에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평가결과를 공유토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주민의 세금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요율현실화는 서비스 사용과 관련된 당사자의 부담으로 저항을 유발할 수 있으나 사용치 않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자원의 재배분을 유도하여 주민 전체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양면을 지니고 있음
 - 특히, 공공시설물의 경우는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를 요하는 시설로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요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이며 이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만 뿐 아니라 타 부분의 예산 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충남도 및 시군의 재정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재원 확보 · 증대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어 적절한 요금부과를 통해 사용자에게 경비의 일부를 부담케 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의 근본적인 취지를 상기시키고 자치재정 확대에 기여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서비스 사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은 공공성의 목적 뿐 아니라 수익자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분야로서 적정한 원가분석과 이를 활용한 요율산정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 충남도와 시군은 스스로 세외수입의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들에게 이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자체재원 확보의 한 축으로써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고승희 연구위원
충남연구원 행정복지연구부
041-840-1231, kosh@cni.re.kr

* 본 글은 2015년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의 실태와 개선과제」를 요약한 것임.

◆ 참고자료 ◆

- 장종규·김언호(2007), “우리나라 지방세외수입의 확충방안–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영남지역 발전연구』, 제37집.
- 김태복·이효(2002),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외수입의 개선방향”, 『한국토지행정학회보』, 제9권 2호.
- 김종상·안경섭(2001), “Borge의 대표자 유권자 모형을 응용한 지방세외수입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비교정부학보』 제5권 제1호.
- 김종순(1999), 세외수입 적정화를 위한 자치입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특별시의회.
_____(2002), “공공서비스의 향상과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 방안”, 『지방재정』, 제21권 제3호.
- 손희준(2001), “지방세외수입의 발전방안”,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총』, 제23집 제2호.
- 이재은·이현성(2001), “지방정부 재정력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 사용자 부담금을 중심으로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18권 제2호.
- 조규일(2013), “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 징수를 위한 법률제정 추진”, 『지방세포럼』
- Allan. Ian J.(1996), Evaluating Alternative Revenue Sources, Jack Rabin, W. Bartley Hildreth, and Gerald J. Miller(eds.). Budgeting: Formulation and Execution, Athens, Georgia: Carl Vinson Institute of Government, The University of Georgia.
- Cooper, R. and R. S. Kaplan(1998), The Design of Cost Management System. Prentice Hall, New Jersey.
- Horngren Charles T.(2000), George Foster. and Srikant M. Datar, Cost Accounting: A Managerial Emphasis, Prentice Hall.
- Neels. Kevin & Caggiano. Michael(1996), Pricing Public Services,; Jack Rabin, W. Bartley Hildreth, and Gerald J. Miller(eds.), Budgeting: Formulation and Execution, Athens(Georgia: Carl Vinson Institute of Government, The University of Georgia).

충남리포트(2016년도)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6-01	행복한 성장을 위한 꿈과 도전, 충남경제비전 2030	강현수 외 2명	2016.01.04
2016-02	공공부문 개혁 요구와 충남에 대한 시사점	김대호	2016.01.07
2016-03	민주주의 패스포트를 통한 로컬거버넌스 구축 방안	김욱 외	2016.01.14
2016-04	금강 중·하류의 물 환경 특성과 큰빗이끼벌레 서식에 따른 대응방안	정종관	2016.01.20
2016-05	충청남도 제조업 개별입지 관리방안	오용준	2016.01.28
2016-06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	김용현	2016.02.04
2016-07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윤태범	2016.02.12
2016-08	충청남도 지역경제 생산성의 특징과 정책 과제	이종윤 · 임재영	2016.02.17
2016-09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의 발전방향과 추진과제	한상욱 · 임형빈	2016.02.19
2016-10	지역에너지 전환과 충남의 에너지정책 방향	여형범	2016.02.24
2016-11	충남 기초공간데이터 구축을 통한 자연마을 과소·고령 실태 분석	윤정미	2016.03.03
2016-12	충남 상생산업단지 정책의 성공전략과 추진과제	장수명 외 2명	2016.03.10
2016-13	충남 경제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정책지원 방안	김태연 외 2명	2016.03.17
2016-14	충남도 에너지 정제·저장시설 입지지역 지원방안	이민정	2016.03.23
2016-15	충남 중대형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현황과 발전전략	홍원표	2016.03.30
2016-16	충남형 지방재정 확충 방안	안연환 외 2명	2016.04.06
2016-17	충남 포괄적 도민안보체제 구축 방향과 과제	김창수	2016.04.14
2016-18	충남 사업장 폐기물 발생 현황과 매립지 갈등 대응 방향	장용철	2016.04.21
2016-19	충남 어촌·어항의 공공디자인 적용 방안	이충훈	2016.04.28
2016-20	충남 지역행복생활권 실태분석과 추진 방향	임형빈 · 한상욱	2016.05.06
2016-21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충남 버스 교통정보체계 구축 방안	김원철 · 정민영	2016.05.12
2016-22	충남 소규모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이관률	2016.05.19
2016-23	충남형 경로당 활성화와 노인 복지	김필두 · 윤준희	2016.05.27
2016-24	충남 폐염전·폐양어장 생태복원과 활용방안	장동호 · 이상진	2016.06.02
2016-25	2040년 충청남도 시·군 인구추계와 정책과제	심재현	2016.06.08
2016-26	체계적 환경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충남형 환경보건 DB 구축 필요	명형남	2016.06.17
2016-27	충남 교통SOC 현황과 정책방향 –도로, 철도 분야를 중심으로-	김형철 · 장준용	2016.06.22
2016-28	농민기본소득제, 충남도 농촌마을에서 실험하자	박경철 · 강마야	2016.06.30
2016-29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축 방안	박경철	2016.07.07
2016-30	충남 시·군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지원방안	최영화	2016.07.14
2016-31	전국과 충남의 미세먼지 현황과 정책제언	명형남 · 김순태	2016.07.21
2016-32	충남 문화유산과 연계하여 전통축제를 육성하자	이인배 외 2명	2016.07.28
2016-33	충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탄소상쇄 활성화 전략	표정기 · 이상신	2016.08.04
2016-34	충남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사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조영재	2016.08.11

■ 충남연구원 홈페이지(www.cn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